

군공항 이전 6조원 사업비, 종전부지 개발로 감당될까

〈현 광주 군공항〉

광주시 ‘기부대 양여’ 방식 추진... 연내 개발로드맵 발표
사업 장기화·금융비용 등 리스크 커 전문가들 우려 목소리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방식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부 예산이 투입되는 특별회계 방식이 아닌, 광주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전남에 건설해주고(기부) 국방부 소유의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양여)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사업 비용은 이전 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이전 주변 지역 지원비 4508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원, 자본(금융) 비용 3825억원 등 모두 5조 748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방식 등에 따라 총 사업 비용은 유동적이다. 그런데 5조원을 웃도는 사업비를 거론하면서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기존 군 공항 부지 개발을 통해 6조원에 가까운 거액의 사업비를 광주시가 거둬들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성공 여부의 가능성

로 종전 부지 개발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높다. 이전 대상지 단체장과 주민 설득의 관건은 경제적 보상 규모라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올 연말 안으로 종전 부지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업 장기화, 막대한 선투입 비용, 인구 감소에 따른 종전 부지 개발 및 분양 가능성 등을 두고 대학교수·금융권·개발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 중심으로 광주시가 떠안을 리스크가 커보인다는 의견이 광주시 사전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종전 부지(현 광주 군공항, 248만평)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광주시에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 장기화, 선투입 비용 등으로 사업 리스크가 크다”며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공항 부지는 지리적으로 우수한 여건을 갖췄으나 광주시 인구 감소 등으로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달 롯데월드, 에버랜드 관계자 역시 종전 부지에 테마파크 건립을 검토 중인 광주시 측에 “국내 테마파크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투자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부 교수는 종전 부지에 인구를 유입하고 집결시키는 핵심 앵커시설 유치가 전제

된다면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광주도시공사조차 지난 2월 종전부지 분양 성공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장기간 기부시설(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자금 회수가 어렵고, 금융 비용이 많이 든다. 공사 부채 비율이 장기간 상승하는 문제로 큰 리스크”라고 사업 참여를 꺼려 했다. 다만 전남개발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함께 참여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군 공항 이전 대상지 단체장과 주민 설득의 관건은 경제

적 보상 규모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종전 부지 개발 성공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막대한 사업비의 원천인 종전 부지 개발이 성공의 가능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 연말 안으로 248만평에 이르는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광주시는 종전 부지에 국제적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해당 지역 전체를 견인할 앵커시설을 유지하는 방안을 개발 로드맵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앵커시설은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만한 핵심 자족 시설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대통령, 조국 사태 후 윤석열과 첫 대면

8일 반부패협의회... 사법계 전관예우 방지대책 등 안건

‘조국 정국’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첫 대면이 오는 8일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관한다.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을 방문한 뒤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이 곧바로 ‘공정 드라이브’ 행보에 나서는 셈이다. 청와대는 지난 달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문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법계 전관예우 방지 대책과 채용비리를 비롯한 일상에서의 불공정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윤 총장의 참석 여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차례에 걸쳐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으며 그동안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이 참석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열리는 회의에 윤 총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이라며 검찰이 더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6일에는 김 오수 법무차관에게 “검찰이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한 바 있어, 이날 회의에서 자세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농민피해 최소화 위해 직불제 예산 확대해야

여야, WTO 개도국 포기 대책 촉구

여야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익형 직불금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관련 예산(2조2천억원)을 3조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개도국

지위 문제 관련 종합 대책을 세울 때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형 직불제”라며 “관련 예산 규모가 3조원 정도는 돼야 공익형 직불제를 제대로 제도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이전부터 논의돼 온 통합 직불제를 정부가 지위 포기 관련 대책이라고 발표한 마당에 현 예산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 규모가 최소한 3조원은 돼야 소규모 농가에도 실질적 혜택이 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새싹들의 그린리더 한마당

5일 오전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그린리더 활동 10주년 기념 '2019 그린리더 한마당'에서 꽃벌로 변신한 새싹그린리더 어린이들과 회원들이 기후행동을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광양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여수 돌산항일암권 개발사업 ‘재검토’

전남도-중앙투자 심사... 14건 사업중 11건 조건부·적정

전남도와 사군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대규모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현안으로, 재검토 결정을 받게 되면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 규모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수립이 불가피해질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러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한 해당 사군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서 14개 사업 중 4개 ‘재검토’=전남도는 최근 실시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중투위)에서 모두 14건의 사업을 올려 11건에 대해 조건부·적정 의견을 받았다. 전남도는 애초 ▲동부권 통합정사 건립(전남도)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목포) ▲선소테마정원 조성(여수) ▲권역재활병원 건립(여수) ▲여

수산단 재난대응 통합인프라 구축사업(여수) ▲국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여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복합 혁신센터 건립(나주) ▲EV/ESS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추진(나주) ▲자능형 저압직류(LVDC) 핵심기술 개발 사업(나주)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광양) ▲수산물 종합유통물류센터 건립(광양)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보성) ▲수산물수출산업거점단지 조성(화순) ▲완도군 실내체육관 건립(완도) 등 14건을 올렸다. 재검토 결정을 받은 사업은 여수시가 올린 선소테마정원 조성, 권역재활병원 건립 등 2개 사업과 광양시가 올린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수산물종합유통물류센터 건

립 등 2개다. 여수시는 지난 3월에도 선소테마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올렸다가 재검토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재검토 결정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머지 사업들은 조건부·적정 의견을 달아 추진토록 해 지역 핵심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나주의 자능형 저압직류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산업 메카’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남도, 지방투자심사에서 63개 사업 중 5개 재검토=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도 최근 63개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 5개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이 미흡하다며 보완해 재상정토록 재검토 처분을 내렸다. 여수시가 추진하는 돌산 항일암권 관광

자원 개발사업의 경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고 객관적 수요조사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검토 판단을 내렸고 순천시 용계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용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등 2개 사업도 총사업비 및 사업지 선정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고흥군이 상정한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해수탕’ 건립사업 등도 민간 영역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데 따른 부정적 입장을 내세워 재검토한 뒤 상정토록 했다. 고흥군의 힐링해수탕 사업도 이미 한 차례 재검토 판정을 받은 뒤 또다시 올린 사업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에 수영장·해수탕 등을 조성하는 실내 사업은 운영비 최소화 방안 등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